시 민

주무관	자활정책팀장	자활지원과장	복지기획관	복지정책실장	행정1부시장
협 조	*자활시설팀장* *주무관*				

문서번호	자활지원과-2319
결재일자	2019.2.2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행정1부시장 방침 제44호

I·SEOUL·U

서울시 노숙인복지 종합계획

2019. 2.

복 지 정 책 실

(자활지원과)

I·SEOUL·U 너와 나의 서울

서울특별시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*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*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제 형성	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–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	■	□	
	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–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–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	■	□	
정책수립	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–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–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	■	□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–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–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–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–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	■	□	
정책집행	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–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–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	■	□	
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–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■	□	
정책홍보	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–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–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	■	□	보도자료 제공예정
기타사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	■	□	
	◆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□	■	

Ⅰ. 서울시 노숙인정책 추진연혁 4

Ⅱ. 종합계획 수립 진행경과 4

Ⅲ. 정책환경 5

Ⅳ. 노숙인 현황 6

Ⅴ. 비전 및 목표 7

Ⅵ. 정책방향 8

Ⅶ. 핵심 추진과제 10

1 체계적인 노숙인 실태조사, 정책 모니터링 10

2 종합적인 노숙인 이력관리 체계 운영 12

3 거리노숙인 전문서비스 강화 14

4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확충, 서비스 접근성 제고 16

5 생활시설 운영개선 및 입소자 편의 증진 18

6 노숙 만성화 예방을 위한 지원주택 지속 확대 20

7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 지원 22

Ⅷ. 연도별 투자계획 24

Ⅸ. 행정사항 25

Ⅰ 서울시 노숙인정책 추진 연혁

□ **'97. 외환위기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'서민생계 안전대책**('98. 4월)**', '도시노숙자 종합지원대책**('98. 6월)**' 발표**

○ '98. 9월 사회복지과 내 도시노숙자특별보호팀 신설

□ **'05. 8월, 사회복지사업에 노숙인복지 업무 편입**

○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2조에 노숙인 조항 삽입

○ '06. 2월 노숙인대책반 신설 → '07. 10월 자활지원과로 명칭 변경

□ **'12. 6월,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·시행**

□ **'12. 6월, 「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」 발표**

□ **'12. 7월, 「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·시행**

Ⅱ 종합계획 수립 진행경과

□ **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평가계획 수립 : '18. 6. 1.(금)**

○ 서울시복지재단 협조, 정책발전방안 연구 계획 수립

□ **노숙인정책 평가 1차 자문위원회 개최 : '18. 9. 11.(화)**

○ 서울시 노숙인정책 평가지표 구성 등 자문

□ **서울시 노숙인 정책발전 토론회 개최 : '18. 10. 30.(화)**

○ 노숙인 당사자, 시설 및 시민단체 관계자, 학계 전문가 320여명 참석

□ **노숙인정책 평가 2차 자문위원회 개최 : '18. 11. 23.(금)**

○ 평가지표에 따른 설문면접 결과 공유, 정책 발전방안 자문

III 정 책 환 경

□ 2018년 상반기 서울시 실업률은 5.0%로 최근 3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, 고용률은 59.7%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

○ 경제여건 난조로 실업률은 전년대비 0.5% 증가, 고용률은 0.5% 감소

기간	2014	2015	2016	2017	2018.상반기
실업률	4.4	4.2	4.2	4.5	5.0
고용률	60.5	60.0	60.0	60.2	59.7

※ 서울통계 자료 인용

□ 서울시 '비주거용주택' 및 '주택이외거주자' 비율은 증가추세이며, 저소득층의 무보증금 월세 또는 무상거주 비율도 증가추세

○ '17년 서울시 비주거용 주택 거주자는 2.1%로 '14년 1.3% 대비 61.5% 증가

○ '17년 서울시 주택이외 거주자는 5.6%로 '14년 3.9% 대비 43.6% 증가

기간	2012	2014	2016	2017
비주거용 주택거주 (상가, 공장, 여관 등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)	3.0	1.3	0.7	2.1
주택 이외 거주자 (오피스텔, 판잣집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움막, 기타주택)	2.1	3.9	7.3	5.6

※ 국토교통부, '주거실태조사' 통계

□ 노숙으로 전락하기 쉬운 저소득층 중 무보증금 월세주택 거주자 또는 무상거주자 지속 증가하고 있음

○ '17년 저소득층 중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 비율은 5.3%로 '12년 4.9% 대비 8.1% 증가, '17년 무상거주자 비율은 5.1%로 '12년 3.8% 대비 60.5% 증가

기간	2012	2014	2016	2017
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	4.9	2.9	5.2	5.3
무상거주	3.8	4.2	5.6	5.1

※ 국토교통부, '주거실태조사'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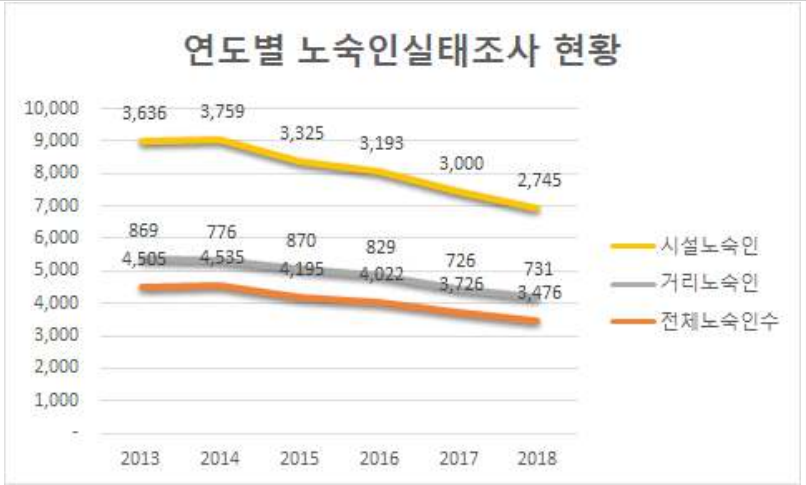
Ⅳ 노숙인 현황

□ 높은 실업률, 주거여건 등 불리한 정책 환경으로 매년 약 2천 명의 노숙인이 신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
○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, 매년 약 2천명 노숙인 신규 등록

('14년 3,108명, '15년 2,592명, '16년 2,151명, '17년 1,979명, '18년 1,929명)

○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.0% 감소(거리노숙인 △3.0%, 시설노숙인 △5.3%)



(단위 : 명)

연도	계	거리 노숙인	시설 노숙인
2013	4,505	869	3,636
2014	4,535	776	3,759
2015	4,195	870	3,325
2016	4,022	829	3,193
2017	3,726	726	3,000
2018	3,476	731	2,745

※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(매년 4회 계절별 서울전역 전수조사 평균인원)

□ 서울시의 전체 인구 대비 거리노숙인 비율은 세계 주요도시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나 지속적인 감소노력 필요

○ 2018년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거리노숙인 수는 731명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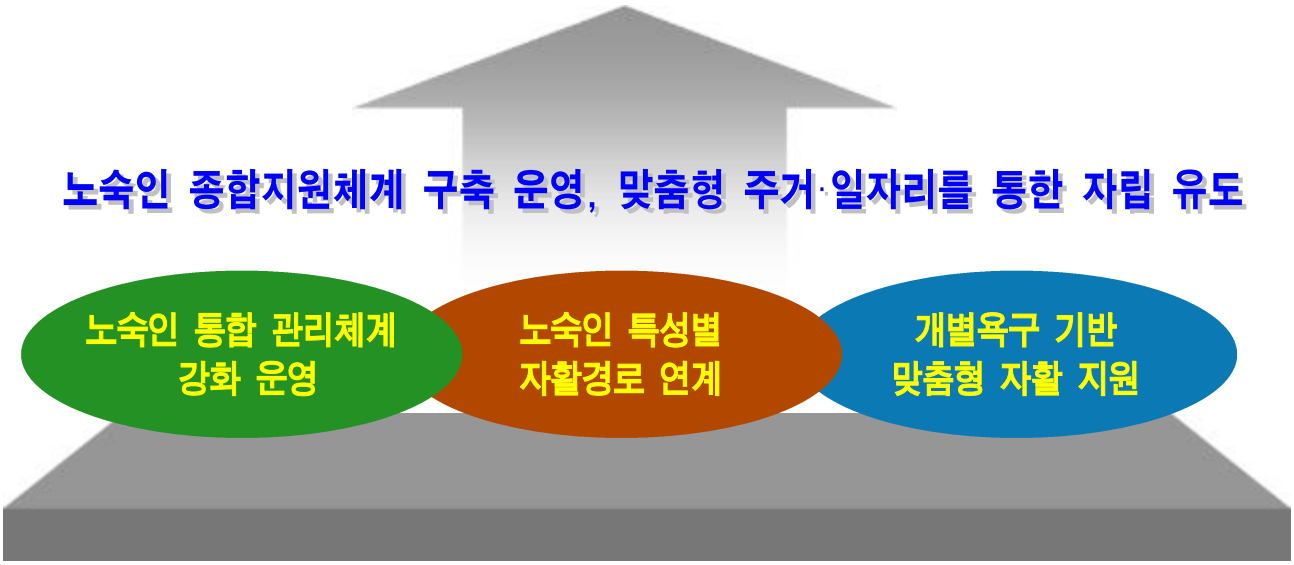
○ 10만 명당 거리노숙인 수는 7.2명으로 뉴욕 등 세계 주요도시에 비해 숫적으로 적으나 서울역, 영등포역 등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체감 인원은 실수 보다 많을 수 있음

도시명	서울	도쿄	뉴욕	런던	파리
인구 10만명 당 거리노숙인 수(명)	7.2	9.0	52.2	15.7	140.2

※ 주요도시별 2017~2018년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내용 및 인구 통계자료 활용

Ⅴ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비전 및 목표

2023년까지 서울시 노숙인 30% 사회복귀



정책목표 및 핵심과제

노숙인 통합 관리체계 강화 운영

▸ 노숙인 자활지원 서비스 체계적 통합 관리

- 서울 전 지역 매년 계절별 정기 실태조사 및 노숙인 설문조사 실시, 정책 반영
-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개선, 노숙인 이력 전체시설 통합관리

노숙인 특성별 자활경로 연계

▸ 거리노숙인 서비스 접근성·효과성 확대 및 노숙인 시설 운영개선

- 종합지원센터 증설, 정신건강팀 확대 등 거리노숙인 서비스 접근성 제고
- 노숙인 재활시설 추가 확보, 만성 노숙인 전문적 치료·보호

개별욕구 기반 맞춤형 자활지원

▸ 시설입소가 어려운 대상층,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적기 지원

-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지원주택 대폭 강화
- 청년 노숙인 특화 지원주택 시범운영
-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지원

Ⅵ 정 책 방 향

❖ 정기 실태조사, 종합지원시스템 운영, 종합지원센터 권역별 운영 등 통합관리체계 강화
❖ 특성별 자활지원경로 다각화, 맞춤형 주거·일자리 지원 확대로 노숙인 자활 효과성 제고

1 노숙인 통합 관리체계 강화 운영 → 서비스 중복 및 회전문 현상 최소화

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노숙인 현황 모니터링

○ 매년 계절별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실시, 조사결과 서울시 통계자료로 발표

○ 노숙인 유입경로, 주요욕구, 건강상태 등 설문조사, 자활정책에 반영

☐ 종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서울시 노숙인시설 서비스 통합관리

○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사용을 전 노숙인시설 의무화, 노숙인 통합 사례관리

○ 개인별 이력 등을 통합관리하여 시설 입·퇴소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 최소화

※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과 유사한 “Coordinated Entry” 시스템을 개발하여 노숙인의 평가, 주요문제, 주요욕구 등을 통합 관리·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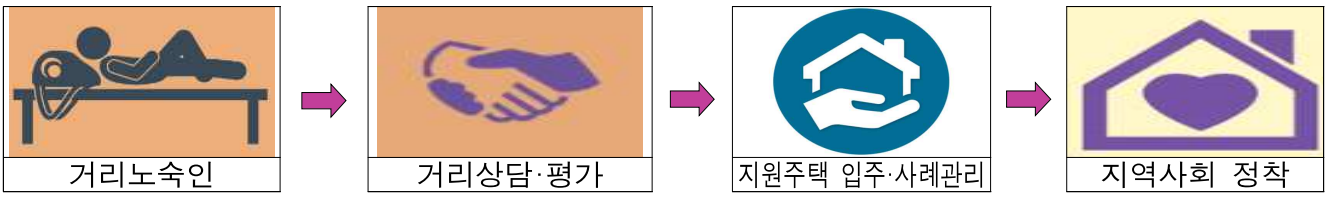
2 노숙인 특성별 맞춤형 자활경로 연계 → 노숙 만성화 예방

☐ 노숙인 특성별 자활지원경로 다각화

○ 시설입소를 통한 자활모델에서 탈피, 개인별 특성에 따라 자활지원 다각화

유형 1 단계적 자활지원 경로(기존방식)

유형 2 정신질환·만성노숙인이나 시설입소 거부자



유형 3 진입 초기 노숙인으로 자립 가능한 노숙인

⇒ **자활지원경로의 다각화 : 유형1 + 유형2 + 유형3**

※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지원시스템에 대상자 등록·평가 후 유형별 지원경로 연계

□ 다양한 형태의 주거서비스 연계, 지역사회 정착 유도

○ 지원주택을 지속 확보하여 정신질환 등으로 시설입소가 어려운 노숙인의 주거편의와 전문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 유도

○ 20~30대 청년노숙인에게 특화된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만성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 예방

3 개별욕구 기반 맞춤형 자활지원 → 서비스 접근성·효과성 제고

□ 노숙인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, 전문적 치료·보호 등 서비스 내실화

○ 종합지원센터 증설(2개소 → 3개소), 권역별 운영으로 서비스 접근성 강화

○ 자존감 향상,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인 자립준비 지원

○ 사생활 보호 개선, 신규 입소자 생활관 운영 등 입소자 편의 향상

□ 근로능력 평가도구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, 자활 효과성 향상

○ 자체개발한 서울시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도구를 활용, 맞춤형 일자리 연계

○ 일자리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연계 확대

Ⅶ 핵심 추진과제

추진과제 1 체계적인 노숙인 실태조사, 정책 모니터링

1 현황 및 실태

○ **서울역 등 밀집지역 노숙인 수만 통계관리, 서울 전역 노숙인 수 미반영**

- 서울역 등 72개 주요 밀집지역 야간상담(20~23시) 및 시설집계자료로 통계관리
- 밀집지역 제외한 노숙인현황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 파악에 한계
- '13년부터 5년간 매년 계절별 전 시설 및 시 전역 거리노숙인 대상 일시집계 조사, 내부 자료로만 활용(실제 취침시간인 0시~3시 조사)

※ '13년 노숙인 시설 및 거리 460지점 조사〔4,505명(거리 869명, 시설 3,636명)〕
→ '18년 노숙인 시설 및 거리 499지점 조사〔3,476명(거리 731명, 시설 2,745명)〕

○ **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연도별 노숙인 추이, 생활실태 등 파악 필요**

- 해마다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및 노숙인사업 수행기관 평가를 근거로 정책수립 추진했으나, 서울시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실태파악 필요

➡ **서울 전 지역 거리노숙인과 시설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집계조사 및 노숙인 설문조사를 실시·발표하고, 매년 노숙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**

2 추진방향

○ **매년 계절별 서울 전 지역 노숙인 일시 집계조사, 통계자료 발표**

- 매년 초 조사계획 수립시 노숙인 위기대응콜 신고지역, 민원 발생지역 등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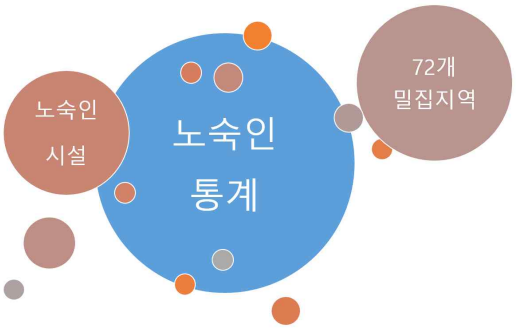
○ **거리 및 시설입소자 설문조사 실시, 노숙환경 및 건강상태 등 파악**

- 거리 및 시설노숙인의 비율별 할당하여 표본설문조사, 개별 실태 파악

3 추진계획

☐ 매년 계절별 노숙인 일시 집계조사, 통계자료 발표

○ 필 요 성 : 연도·계절별 서울시 전체 노숙인의 실규모 파악, 정책에 반영

현 행	개 선
노숙인 시설 및 72개 주요 밀집지역 거리노숙인 집계 평균	노숙인시설 및 서울 전역 심야시간 계절별 노숙인 일시 집계조사
	
	노숙인 시설 + 서울 전역 거리노숙인

○ 추진주체 : 서울시(자활지원과), 자치구, 복지재단 및 노숙인시설협회 공동

※ LA시는 매년 1월 노숙인정책 민관협력기구인 LAHSA를 통해 관할지역 전체 노숙인 일시 집계조사, LAHSA 및 LA시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자료 발표

○ 조사시기 : 매년 계절별 1회(5, 7, 10, 12월) 새벽 0 ~ 3시 일시 집계조사

☐ 노숙인 설문조사 실시

○ 조사대상 : 거리 및 시설노숙인 450명(거리·시설 유형별 비율 할당표집)

○ 조사내용 : 노숙환경, 노숙기간, 노숙 이전 거주지, 건강상태, 알코올의존증 여부 등

○ 조사방법 : 연 1회 거리 및 시설 방문 면접조사(1:1 조사)

☐ 소요예산 : 63백만원('19년 기준, 시비 100%)

4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주요사업	투 자 계 획					
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노숙인 실태조사	329	63	65	66	66	69

추진과제 2 종합적인 노숙인 이력관리 체계 운영

1 현황 및 실태

○ **일부시설의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미사용으로 통합관리에 제한**

- '13년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,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
- 노숙인 시설 43개소 중 37개소는 시스템에 입력관리하나 6개소는 미사용

※ 현행 제도상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의 사용(입력관리)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시설은 시스템 미사용, 별도로 현황을 보고하고 있음

➡ **서울시 모든 노숙인시설이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을 사용토록 조치하고, 이력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 방지, 회전문현상 최소화**

2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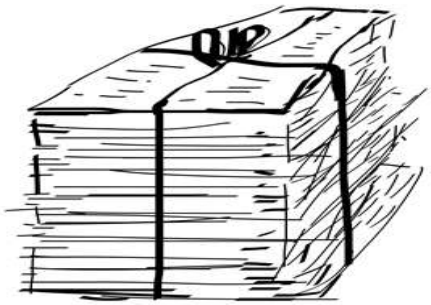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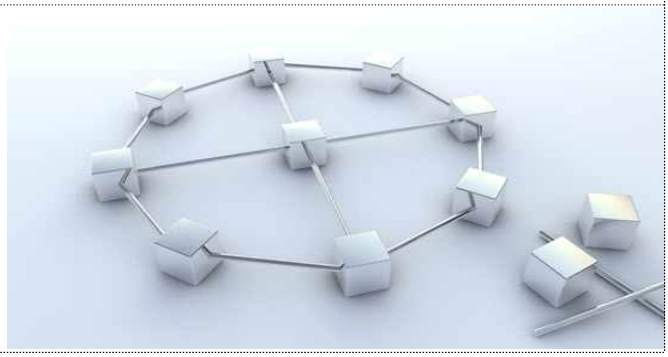
○ **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으로 전 노숙인 통합 이력관리**

- 서울시 노숙인 복지 조례에 반영, 전 노숙인시설 서비스 이력 통합관리 의무화

3 추진계획

☐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으로 노숙인 이력 통합관리

○ **필 요 성 : 노숙인 통합 사례관리**(개인 건강관리 이력, 취업 사례관리, 이탈자 추적관리 등)**를 통해 소외·방치 등 서비스 사각지대 예방**

현 행	개 선
일부시설 개별 이력관리, 서비스 분절	종합지원시스템 통한 통합사례관리, 효율적 서비스 제공
	

○ **추진방법 : 시 법인·시설 관리시스템에 노숙인시스템 이관**('18. 12월 완료),
노숙인 복지 조례 등에 통합시스템 사용 의무화

※ 향후 서울시 일반 시민대상의 생활복지시스템(복지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)과도 통합 추진

○ **연차별 추진계획**

-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, 법인시설시스템에 통합 : '18. 12월 완료
- 노숙인시설, 종합지원시스템 사용(노숙인서비스 이력관리) 의무화 : '19. 상반기

추진과제 3 거리노숙인 전문서비스 강화

1 현황 및 실태

○ **밀집지역 현장상담소인 희망지원센터 2개소 중 서울역만 24시간 운영**

- 서울역희망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나 영등포희망지원센터는 겨울철에만 주 7일 24시간 운영(평상시에는 주5일 주간시간 운영)
- 서울역희망지원센터는 여성 전용 응급구호방이 설치된 반면, 영등포희망지원센터는 남성 응급구호방만 운영하여, 시설내 여성노숙인 응급보호 불가

○ **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거리노숙 만성화 초래**

- 거리노숙인의 평균 노숙기간 12년으로 53.5%가 신체질병, 24.8%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음 ※ '17년 서울시 거리노숙인 설문조사 결과
- 알코올의존증과 정신질환 등으로 시설입소 거부, 시설입소 후에도 부적응 사례 다수
- 현재 노숙인 정신건강 전문요원 9명(다시서기센터 8, 브릿지센터 1) 배치 운영 중이지만 영등포지역 등 만성 노숙인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임

➡ **영등포 희망지원센터도 상시 24시간 운영 및 여성노숙인 응급보호 공간을 마련하고, 정신건강팀 인원을 보강하여 관할 서비스지역 분담**

2 추진방향

○ **영등포희망지원센터 기능보강**(여성 응급구호방 설치 등) **및 상시 24시간 운영**

○ **영등포지역 노숙인 정신건강팀 신설운영, 정신질환으로 인한 만성적 노숙인 지원 강화**

3 추진계획

☐ 영등포희망지원센터 기능보강, 영등포역 거리노숙인 상시 응급지원

○ 추진내용 : 상시 24시간 운영인력 배치 및 여성 응급구호방 설치

현 행	개 선
▪ 평상시 주5일 주간시간에만 운영 - 배치인력 : 비정규직 2명 - 운영시간 : 주5일 9~18시 - 시설구성 : 컨테이너 4개동, 상담소, 화장실, 샤워실, 남성방 2개소 ※ 동절기 8명 배치, 주7일 24시간 운영	▪ 인력 증원하여 상시 24시간 운영하고, 시설 증축부지 확보하여 여성방 설치 - 인력증원 : '19년 6명 증원(2명 → 8명) - 운영시간 : 연중 상시 24시간 - 향후계획 : 증축부지 확보, 여성 구호방, 및 편의시설, 상담공간 등 추가설치

○ 연차별 추진계획

-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상시 24시간 운영인력 증원(6명) : '19. 1월
- 증축부지 확보, 시설 증개축 : '20. 연중

☐ 노숙인 정신건강팀 보강, 권역별 운영 확대

○ 추진내용 :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인력 증원, 서울 전역 서비스 분담

현 행	개 선
▪ 정신건강팀 9명 배치 운영 - 운영기관 : 다시서기·브릿지 공동운영 - 배치인력 : 정신과전문의 등 9명 ※ 다시서기 8명(위기대응콜 연계지원 등), 브릿지 1명	▪ 정신건강팀 12명 배치 운영 - 인력보강 : '20년 3명 증원 - 배치형태 : 서울역(8명), 영등포역(2명), 시청·을지로(2명) 권역별 운영 ※ 종합지원센터에 배치

○ 추진계획 : 정신건강팀 3명 증원, 권역별 배치('20년)

4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주요사업		투 자 계 획					
	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계		(X 685) 12,572	(X 65) 1,471	(X 65) 5,940	(X 185) 1,670	(X 185) 1,720	(X 185) 1,771
1	희망지원센터 운영 (위기대응콜 및 거리상담 포함)	9,729	999	5,454	1,060	1,092	1,124
2	정신건강팀 운영	(X 685) 2,843	(X 65) 472	(X 65) 486	(X 185) 610	(X 185) 628	(X 185) 647

※ '20년 영등포희망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증개축 예산 4,425백만원 포함

추진과제 4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확충, 서비스 접근성 제고

1 현황 및 실태

○ **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역 인근에만 2개소 설치운영, 그 외 지역 노숙인 지원에 한계 발생**

- '12년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5개 상담보호센터 중 시립시설 2개소(다시서기, 브릿지)를 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설치
  · '12년 민간 상담보호센터 3개소(옹달샘, 햇살, 만나샘)는 일시보호시설로 변경 설치하고, '16년 여성전용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추가 설치
- 현행법상 종합지원센터만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의뢰가 가능하여 입소 지연사례 발생

※ 종합지원센터 주요기능 : 거리노숙인 상담, 응급잠자리·식사·샤워 등 편의서비스 제공, 시설입소 의뢰, 일자리·주거상담 및 연계, 임시주거지원 등

➡ **종합지원센터 추가설치, 서울역 이외 지역 노숙인 서비스 접근성 제고**

2 추진방향

○ **노숙인종합지원센터 추가설치, 거리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**

- 서울 서남권 소재 기존 노숙인시설을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

3 추진계획

☐ **종합지원센터 권역별 운영으로 노숙인 서비스 접근성 강화**

○ **추진내용 : 종합지원센터 증설**(2개→3개소), **서울 전역 서비스 접근성 제고**

현 행	개 선
▪ 서울 중부권에만 2개소 설치운영 - 다시서기(용산구) : 서울역·용산역 주변 등 노숙인 지원· 관리 - 브릿지(서대문구) 운영 : 시청·을지로 및 종로 일대 등 지원·관리	▪ 종합지원센터 증설, 권역별 운영 - 영등포 노숙인시설 중 1개소를 종합지원센터로 전환 추진('19년), 운영('20년~) - 장기적으로 서울 동남권역(강남·서초 등) 센터 증설 또는 버스형 이동상담소 운영

※ 세번째 밀집지역인 영등포역 주변은 현재 일시보호시설 2개소(옹달샘·햇살)에서 관리

○ **필 요 성 : 종합지원센터가 중부지역에만 몰려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하고, 현행법상 시설 입소의뢰 권한이 종합지원센터에만 있어 한계 발생**

○ **연차별 추진계획**

- 서울 서남권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증설 : '19. 연중
- 서울 동남권역 이동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검토 : '21. 연중

※ 서울 동남권역은 전환대상 노숙인 시설이 없고,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신규설치가 어려우므로 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식 종합지원센터(상담버스) 운영 검토

※ 호주에서는 민간단체가 거리 노숙인에게 일시적인 잠자리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슬립버스 운영

□ **소요예산 : 6,876백만원**('19년 기준, 시비 100%)

4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주요사업		투 자 계 획					
	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계		40,607	6,867	8,103	8,293	8,543	8,801
1	종합지원센터 운영	27,113	4,347	5,480	5,591	5,760	5,935
2	일시보호시설 운영	12,083	2,276	2,344	2,415	2,487	2,561
3	서울역 무료급식장	1,411	244	279	287	296	305

※ 노숙인시설 1개소를 '20년에 종합지원센터로 전환·운영함에 따라 10억원 증액

※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운영 외에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별도사업(위기대응콜, 정신건강팀, 희망지원센터, 자치구 상담반 운영) 예산은 포함하지 않음

추진과제 5 생활시설 운영개선 및 입소자 편의 증진

1 현황 및 실태

○ **재활시설 입소기간이 비교적 짧아 입소자의 충분한 재활기간 확보 부족**

- 재활시설의 입소 기간은 1년으로 정신질환·알코올의존증 노숙인이 재활치료와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비교적 짧음(비교적 건강한 대상자가 입소하는 자활시설은 2년)
- 재활시설 정원대비 입소자 충원비율은 88%로 타 시설대비 높은 편임(자활시설 73%)

○ **생활시설 거주공간을 다인실로 운영, 입소자 사생활 보호 미흡**

- 대부분의 노숙인시설 생활실이 3~8인실 온돌방이어서 사생활 보호가 어려움
- 만성노숙인의 신규 입소시 위생문제 등으로 기존 입소자와 마찰 발생

➡ 재활시설 입소기간을 자활시설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고, 입소자 사생활 보장·신규 입소자 적응 지원 등 편의확대

2 추진방향

○ **노숙인 재활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재활훈련 지원**

○ **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사생활 보장 및 신규자 적응을 위한 환경 개선**

3 추진계획

☐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을 위한 재활시설 운영 강화

○ **추진내용 : 재활시설 입소기간 2년으로 연장, 시설 전환으로 재활시설 확충**

현 행	개 선
▪ 노숙인 시설 입소기간 자활시설 2년, 재활시설 1년으로 상이 - 재활대상 노숙인이 1년 내 자립준비 어려움 - 재활시설 정원대비 충원율이 높아 생활불편(재활시설 88%, 자활시설 73%)	▪ 재활시설 입소기간 연장, 노숙인의 충분한 재활기간 확보 - 재활시설 입소기간 1년→2년으로 연장 - 자활시설 2개소(100명 규모)를 재활시설로 전환 ※ 재활시설 입소기간 연장시 시설 충원율이 더욱 높아져 전문성약화·공간부족이 우려됨

○ **연차별 추진계획**

- 재활시설 입소기간 연장 : ’19. 5월
- 추가예산 마련, 자활시설 2개소 재활시설로 전환 : ’20년 ~ ’22년

※ 보건복지부의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(상시 30명~50명 자활시설 7명 이상, 재활시설 9명 이상) 등 시설별 지원 및 설치기준 상이

※ 재활시설 입소기간 우선 연장 후 입소현황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연간 지원계획에 반영 필요

▢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사생활 보장 및 편의 개선

○ **추진내용 : 생활실 내 칸막이 등 설치 및 신규 입소자 생활실 별도 운영, 입소자 자존감 향상·자활동기 부여 프로그램 강화**

현 행	개 선
▪ **생활시설 입소자 사생활 보호 미흡** - 대부분 생활실이 다인실(3~8인)구조로 단체생활 부적응자 시설입소 거부 - 신규자 입소시 생활규칙 미숙지, 위생관리 등으로 갈등요인 증가 ▪ **입소자 자활의지 또는 동기 부족**	▪ **칸막이 등 설치, 입소자 사생활 보호 개선** - 생활실 내 칸막이·사물함 설치하여, 생활시설 입소자 사생활보호 개선 - 대형시설의 경우 신규자 전용 생활실 별도 마련, 갈등 최소화 ▪ **입소자 자존감 향상을 위한 전문상담·체험 프로그램 반영**

○ **추진계획 : 매년 5개소씩 입소자 사생활보장 관련 기능보강 지원(총 37개소)**

4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주요사업		투 자 계 획					
	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계		(X 17,409) 127,400	(X 3,279) 24,821	(X 3,377) 24,739	(X 3,279) 25,478	(X 3,583) 26,239	(X 3,691) 27,073
1	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	(X 17,409) 127,050	(X 3,279) 23,921	(X 3,377) 24,639	(X 3,479) 25,378	(X 3,583) 26,139	(X 3,691) 26,973
2	시설입소자 사생활보장 관련 기능보강	400	-	100	100	100	100

※ 상기 예산은 노숙인 자립퇴소, 법인의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해 감소될 수 있음

추진과제 6 노숙 만성화 예방을 위한 지원주택 지속 확대

1 현황 및 실태

○ **시설 퇴소 후 공공임대주택 1,163호에 1,576명이 입주하여 지역사회 정착**

-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% 수준으로 노숙인이 자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(매입임대주택 1,004호 1,389명, 공동생활가정 159호 187명)
- 노숙인 지원주택 38호 시범운영('16.11월~'19년 현재) 결과, 적절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도 지역사회 정착이 가능함을 확인

○ **정신질환, 알코올의존증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는 시설보호나 자립생활에 한계**

- 정신질환·알코올의존증 노숙인은 질환으로 인해 시설 적응이 어렵고, 자기관리 능력 미흡으로 공공주택에 입주하여도 생활유지가 어려움
- 대부분 노숙인시설은 입소자가 40~50대 중년층이어서 20~30대 청년 노숙인은 시설적응이 어렵고 만성화되기 쉬움

※ 전체 노숙인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28.6%이며, 20~30대 노숙인 비율은 전체 규모의 6.3%로 나타남(2016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2,032명 설문조사)

➡ **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, 청년 노숙인 등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연계사업 필요**

2 추진방향

○ **정신질환·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지원주택 확대로 특성별 자활경로 설계·지원**

○ **20~30대 청년노숙인 지원주택 운영,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만성화 예방**

3 추진계획

☐ **지원주택 대폭확대, 정신질환·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입주지원**

○ **추진내용 : 향후 5년간 지원주택 300호 추가 확보 및 사례관리 강화**

현 행	개 선
▪ 정신질환·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지원주택 38호 시범운영 – 전담 사례관리자 2명 배치 지원	➡ ▪ 지원주택 5년간 300호 추가확보, 정신질환·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지원 – 사례관리자 평균 6호당 1명 배치, 입주자 전담

○ **추진계획**

- '19년 100호, '20년부터 매년 50호씩 추가 확보 운영
- 지원주택 수 증가에 따른 사례관리자 지속 확보, 전문 재활지원

※ 배치기준 : 정신질환 7호, 알코올의존증 5호당 1명 사례관리자 배치(현 19호당 1명)

☐ 청년노숙인 특화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

현 행	개 선
▪ 20~30대 노숙인이 전체의 6.3% 수준이나 특화 자활사업 미비	▪ 청년노숙인 특화 지원주택 시범운영, 20~30대 노숙인 조기 자활지원 추진 - 해외사례 검토, 2년간 시범운영(30명 규모) - 사업평가 후 확대여부 검토

○ **연차별 추진계획**

- 청년노숙인 특화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: '20년
- 청년노숙인 특화 지원주택 시범사업 평가, 사업지속 검토 : '21년

※ 해외사례

〈핀란드〉 핀란드에서는 노숙인 주거우선 정책(housing first)으로 유럽국가 중 드물게 노숙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('17년 기준 전국 7,112명, 헬싱키 3,760명),

〈영국·호주〉 청년 노숙인에 특화된 주거(Foyer)를 제공하고, 조기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노숙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있음

<핀란드 헬싱키의 구세군 지원주택>

<호주 퍼스의 Foyer Oxford 운영사례>

4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주요사업		투 자 계 획					
	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계		10,043	502	2,132	2,074	2,469	2,866
1	노숙인 지원주택 운영	8,301	502	1,346	1,765	2,151	2,537
2	청년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	1,742	0	786	309	318	329

추진과제 7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 지원

1 현황 및 실태

○ **연간 연인원 2,600여명의 노숙인에게 민간·공공 일자리연계, 자활 지원**

- '18년 노숙인 1,107명에게 특별자활근로 등 공공일자리 제공하였고, 1,154명에게 민간취업 연계(건설일용 507명, 경비·운전·시설관리 431명, 서비스직 165명, 생산직 51명)
- 공동(자활)작업장 16개소 설치,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숙인 382명에게 일자리 제공
-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박람회 개최, 노숙인의 민간일자리 선택의 폭과 취업기회 확대

○ **상당수 노숙인이 근로욕구는 있으나 근로능력·경험이 부족하여 일자리 연계에 어려움 발생**

- 서울연구원 노숙인 욕구조사 결과 노숙탈출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거(51.4%)와 일자리(42.9%)로 응답 ※ 박은철(2015), 「노숙 진입에서 탈출까지 경로와 정책과제」
- 서울시 노숙인 평균연령은 52세로 중년층 이상이 다수이며, 69.3%가 신체질병 또는 정신질환이 있어 민간일자리 구직 및 근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
- 민간일자리 참여자 중 일용직이 45%로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짐

※ 민간일자리 참여자 1,154명 근속기간 : 1년 미만 804명(69%), 1년 이상 350명(31%)

➡ **노숙인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연계하고, 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**

2 추진방향

○ **근로능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일자리 지원**

○ **일자리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 확대**

○ **노숙인시설 유휴시간대 활용 또는 공간 확보하여 공동작업장 추가설치 지원**

3 추진계획

▢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도구 활용, 맞춤형일자리 확대 지원

현 행	개 선
▪ **시설별 노숙인 상담 후 일자리 연계, 근로유지에 한계 발생** - 노숙인 근로 연계시 분류기준 미비 - 전반적으로 노숙인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져 실질적 자활에 어려움 발생	▪ **서울형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도구 (S-HOWCAT) 적극활용, 맞춤형 일자리 제공** - S-HOWCAT 활용,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 후 결과를 반영하여 맞춤형 근로연계 - 일자리의 단계적 전환(공동작업장-특별 자활근로-일자리갖기-민간일자리)을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연계, 자활효과성 제고

※ 서울형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도구(S-HOWCAT) : '18년 말 서울시가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개발한 평가도구로 노숙인 연령, 신체질환, 정신질환, 근로의욕, 자기관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

○ **추진계획**

- 시설종사자 대상 서울형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도구 활용 교육 실시 : '19. 4월
-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·일자리박람회 개최, 민간일자리 발굴지원 : 연중
- 노숙인 근로능력평가 결과 통계관리 : 연중

4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주요사업		투 자 계 획					
	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계		59,826	10,320	11,661	12,244	12,611	12,990
1	노숙인 등 일자리지원	59,826	10,320	11,661	12,244	12,611	12,990

Ⅷ 연도별 투자계획

주요사업		투 자 계 획					
	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계		(X 18,094) 250,827	(X 3,344) 43,144	(X 3,442) 52,640	(X 3,664) 49,825	(X 3,768) 51,648	(X 3,876) 53,570
1	노숙인 실태조사	329	63	65	66	66	69
2	종합지원센터 운영	27,113	4,347	5,480	5,591	5,760	5,935
3	일시보호시설 운영	12,083	2,276	2,344	2,415	2,487	2,561
4	서울역 무료급식장	1,411	244	279	287	296	305
5	희망지원센터 운영 (위기대응콜 및 거리상담 포함)	9,729	999	5,454	1,060	1,092	1,124
6	정신건강팀 운영	(X 685) 2,843	(X 65) 472	(X 65) 486	(X 185) 610	(X 185) 628	(X 185) 647
7	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	(X 17,409) 127,050	(X 3,279) 23,921	(X 3,377) 24,639	(X 3,479) 25,378	(X 3,583) 26,139	(X 3,691) 26,973
8	시설입소자 사생활보장 관련 기능보강	400	-	100	100	100	100
9	노숙인 지원주택 운영	8,301	502	1,346	1,765	2,151	2,537
10	청년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	1,742	-	786	309	318	329
11	노숙인 등 일자리지원	59,826	10,320	11,661	12,244	12,611	12,990

Ⅸ 행정사항

○ 서울시 노숙인 종합계획 보고 및 보도자료 제공 : '19. 2월
○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백서 발간 : '19. 2월 ~ 10월
○ 노숙인 지원주택 확대운영 계획 수립 : '19. 상반기
○ 종합지원센터 증설관련 계획 수립 : '19. 상반기
○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보고 : 매년 1월

붙임 1. 서울시 노숙인 현황 추이 1부.
2.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운영현황 1부.
3. 서울신 노숙인시설 운영현황 1부. 끝.